



코스피 5600 ‘질주’… 19만전자 ‘돌파’

시총 ‘1조 클럽’ 253곳으로
특정업종 쏠림은 더 심해져
코스피 3.09% 오른 5677.25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고침’하며 5600선을 넘어섰
다. 삼성전자가 ‘19만전자’ (주가
19만원)에 오르며 지수를 이끌
었다. 시장 뭉치돈이 증시로 물
리면서 시가총액 ‘1조클럽’ (1조
원)에 이름을 올린 상장사는 253
곳으로 늘어났다. 이제껏 가본
적 없는 코스피 6000선이 눈앞이
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지
수만 쏜다’이다. 특정 업종에 대
한 과도한 쏠림으로 국내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은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
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9% 오
른 5677.25에 장을 마쳤다.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일
시 효력 정지)가 발동된 코스닥
지수는 4.94% 상승해 1160.71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가
1조500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
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
도체 초호황(슈퍼사이클)’에 대



코스피가 5600선 돌파한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한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한몫했
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
보다 4.86% 오른 19만원에 거래
를 마쳐 최고가를 다시 썼다. 장
중에는 19만900원까지 치솟았
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

다 1.59% 상승한 89만4000원에
마감했다. 두 기업의 시가총액
은 1125조원, 650조원으로 늘어
났다. 눈치 빠른 ‘스마트 머니’는 대
형주를 사들이고 있다. 이날 기

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상장사
(우선주 포함)는 253곳이다. 지난
해 238곳 보다 15개가 늘었다. 이
같은 몸집 불리기 현상은 지수
급등과 맞닿아 있다. 올해 코스
피는 34.48%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코스피 6000 달성
도 시간 문제란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
은 최근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6000에서 7500으로 상향 조정했
다. JP모건은 목표치를 올린 배
경으로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함
께 배당소득 분리와세를 꼽기도
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날 “12개국 광의통화(M2)를
합산한 글로벌 유동성은 118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국내 고객 예탁금도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의 유동성 증가는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긍정적
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
다. 향후 1년 코스피 전망치 상단
을 7900으로 제시했다.

시중 뭉치돈도 증시로 향하
다. 13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99조2736억원, 신용거래 용자는
31조4767억원으로 집계됐다.

《2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엿보기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4일(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
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
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자산 설계가 절실합
니다.

메트로신문은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주식·부동산 등 자
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
식·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엿볼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 ◆ 일 시 : 3월 24일(화)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 ~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내란수괴 윤석열 ‘무기징역’

法,尹 등 8명 선고 공판
계엄 등 모든행동 ‘폭동’ 속해

12·3내란 사태로 재판에 넘겨
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무
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2·3 내
란 사태 이후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극연)는 이날 내란 우
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
열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12·12군사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
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은 최종형인 무기징
역과 같은 형량이다. 윤 전 대통
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선고
내용을 직접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를 점거하거나 주요 정치인
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발
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 및
당시 여야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을 체포하는 등 국회를 사실상
장기간 마비시키려는 등 국헌 문
란에 목적이 있다고 봤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를 하
는 것 자체는 법률 위배가 아니
나 계엄의 목적이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였다는만큼 위법
하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계
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포
등 윤 전 대통령이 행한 모든 행동
은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폭동’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청년층 ‘쉬었음’ 47만명…李 정부의 새 과제

데이터처, 29세 이하 실업률
전년비 0.8%p 오른 6.8%
‘일자리 없음’ 등이 주요 사유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 고착

청년층 고용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그냥 쉬었다’라는 통
계 문구가 익숙할 정도로 20대
일자리 부족은 사회의 ‘일상’이
돼 가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60대 이상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끄는 상황이 고착화됐
다. 반면 29세 이하 고용률 등은
주요국 비교에서 하위권을 맴도
는 처지다.

최근 집계에서도 부진은 지속
됐다. 이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2
년 차로 접어드는 이재명 정부에
큰 정책 숙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에 따르면 올해 1월 15~29세 청
년층 ‘쉬었음’ 인구는 46만9000
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만
5000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의 직격탄을 맞은 2021년 1월
(49만5000명) 이후 가장 많다.

쉬었음은 구직 의사가 순전히
없음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들은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
려움’, ‘다음 일 준비’, ‘일자리 없
음’ 등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일
할 능력이 있음에도, 양질의 일
자리가 모자란 탓에 경제활동 참
가를 접고 있다는 의미다.

또 1월 15~29세 실업률은 전
년동월의 6.0%보다 0.8%포인트
(p) 오른 6.8%를 기록했다. 청년
층 실업률은 4년간 5.9~6.0% 사
이를 오가다 지난달 크게 뛰었
다. 1월 기준 2021년(9.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성이
더 짙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20대 일자리 중 상용직
수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로 내려앉았다.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
에 따르면 올해 1월 20대 임금근
로는 30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9000명 줄었다. 이 가운데 상
용직이 204만2000명으로 1년 사이
17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마이크로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2014년의 220만9000명 이후 가장
적다. 청년층 상용직 수는 2023년
1월(244만4000명) 정점을 찍은 뒤
3년째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등이 어
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유럽의 사례도 등장했다. 한국
고용정보원이 19일 펴낸 ‘해외



▲국민의힘 “李, 사법개혁 3법 거부권 행사
해야”
▲이 대통령 “담합행위 시장 영구 퇴출 적극 검토
해야” /사진 뉴시스

▲靑 “남북 접경지역 긴장 고조행위 삼가고 평화
노력 함께 하길”
▲국힘, 23일 1차 인재영입 발표…“새로운 얼굴
지속해서 발굴”

▲성남시장 “국토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물
량제한 폐지해야”
▲국방부 “비행금지구역 복원, 대비태세 영향 없
도록 보완”